

‘극단 선택 여중생 계부 엄벌 촉구’ 지역사회 공분 확산

시민단체 “법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 주장 국민청원 3만3600여명 사전 동의...공개 검토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여중생들이 숨지기 전 성범죄와 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확인됐지만,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를 보여준다.

충북교육연대와 스쿨미투지모임, 여성연대는 17일 “해당 사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닌 법 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와 학대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기 분리가 기본임에도 수사기관은 안일했다”며 “경찰과 검찰의 사법적 처리 속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절

차는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킨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지원했다면 여중생들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기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학생자살 예방 교육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젠더 권력과 나이 위계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폭력”이라며 “우리 사

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발생 시 교육청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 검찰 등이 공조하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두 명의 중학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7일 오후 2시40분 기준 3만360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한다. 이 청원은 이날 기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5시11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

파트 단지 화단에서 각기 다른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선 유서 형식 메모가 발견됐지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학대와 성범죄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계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후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문가 분석과 증거 수집 등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됐다.

경찰은 여중생들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



충북교육연대와 스쿨미투지모임, 여성연대는 17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검찰청 정문 앞에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러 했으나 검찰과 협의 후 보완수사를 통해 재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의 보완 요구가 복잡한 사항이 아니어서 조만간 영장 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의붓딸은 학대한 혐의다.

경찰은 의붓딸 친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붓딸에 대한 학대 여부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취재본부



‘대북전단 살포자 법대로 처벌하라!’ 김상기(왼쪽 세 번째부터) 6.15경기농민본부 상임대표, 박홍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접경지역 농민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남북평화와 접경지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엄중 단속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주시,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에 법적 책임...‘무관용 원칙’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족 간 전파가 발생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주시에서는 16일 현재 해외입국자 23명을 포함 1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 방역당국은 지난 5월 2일 유흥주점 확진자 발생 이후 3만 2,020건의 전방위적인 선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2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1일 200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주말에도 진남경기장 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확진자 발생지에 대한 출장 검사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타 지역 방문과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자 접촉 의심, 감기 등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오봉 여주시장은 지난 15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다음 한 주를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는 전 시민 집중방역 기간으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져달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음주 측정 세차례 거부, 현직 경찰관 입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시기에 음주 운전엔 현 경찰관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

해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0분 동안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검문을 통해 A경위를 입건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행택기자

해남서 열린 배드민턴대회서 확진자 발생...경기 중단

경북지역 대학생 1명 확진·대회 참가자 전수검사

전남 해남에서 열린 전국 규모의 배드민턴대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대회가 중단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남에서 열린 전국 불철배드민턴리그전에 참가한 경북지역 한 대학생이 코

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지난 13일 대회 시작 전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16일 열감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 10여 명과

대회 참가자 2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회는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방역당국은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대회 참가자들은 귀가 조치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